

# 출생 코호트별 영유아 가구의 교육·교육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 - 무상 보육 정책 시행 전후를 중심으로 -

최 효 미\*\*

본 연구는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 전후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행태를 종단면 자료 및 출생코호트별로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변화에 따른 행태 변화를 포착하려는 시도이다. 분석 결과,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 시행을 전후하여 전반적으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기관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부모의 직접 양육보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 1. 들어가는 글

현행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무상보육)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2 양육수당) 하도록 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무상교육·보육의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2013년부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교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이 실시되게 된 것은 2013년 이후로, 그 전에는 일부 연령 혹은 특정 소득계층에 한해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형태였다(나정, 2014). 한편, 2012년도에는 0~2세와 5세에 한해서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이 실시되었다.

---

\* 본고는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육아정책연구소)의 일부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어떠한 형태로든 인용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다수의 선행연구는 정부의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제도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밀려 급작스럽게 도입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백선희, 2012; 신하영, 2013; 윤희숙, 2014; 전운정, 2014 등). 즉, 현행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은 그 효과성보다는 당위성이 보다 강조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 도입 이후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영아 부모들까지 어린이집 이용을 하면서 맞벌이 가구의 기관 이용이 어려워지고(민연경·장한나, 2015: p.111), 교육·보육 기관 대기자 증가 및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촉발되는 등(김사현·주은선·홍경준, 2013: p.217)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담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계량화된 연구(윤희숙, 2014; 조경엽·유진성, 2013; 박미경·조민호, 2014 등)는 소수에 불과하여<sup>1)</sup>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계량적 연구가 적었던 이유로는 제도 도입 이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에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만큼 정부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보다 면밀한 고찰과 검증을 통한 정책의 방향성 모색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가계 부담의 완화라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출산율 제고, 일·가정양립 지원, 동등한 교육·보육 기회 보장 등이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기대효과로 주로 언급되곤 한다(이진화·박진아·박기원, 2015: p10~11). 본 연구는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변화가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행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은 가구 특성 및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는 다를 것이며, 영아와 유아 또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띤다. 따라서,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유아 가구의 특징을 면밀히 관찰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시행된 시기를 중심으로 영유아 가구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정된 재정의 보다 효율적 집행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수의 기존 연구들이 주로 횡단면 혹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행태를 분석해 온 것에 반해, 본 연구에는 자녀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다양한 코호트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출생 코호트에 따른 동태적 변화를 탐색해보고, 종단면 패널 자료를 통해

1)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DBpia 등에서 ‘무상 보육’,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보육 비용’ 등으로 검색하여 추출된 연구 논문 중에서, 2013년 이후 정책 효과 분석에 관한 논문 중 계량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논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윤희숙(2014)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종속변수로 하며, 조경엽·유진성(2013)은 소득재분배효과를, 박미경·조민호(2014)는 보육비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정책 효과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차이가 있다.

## II. 무상보육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영유아를 위한 무상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지원은 2000년대 들어 그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금액이 점차 확대되어오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0~2세와 5세에 한해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2013년도에는 전 연령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함께 가정 내 양육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영유아를 위한 무상 교육·보육에 대한 논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김은설 외(2016: p.394~398)에 따르면, 영유아 대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3~5세 누리과정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3.7%, ‘0~2세 보육료 지원’이 24.1%, ‘가정 양육수당’이 16.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2.5%가 만족한다(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는 47.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으로 보육·교육비 지원을 인상해야한다는 응답이 19.5%,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해야한다는 응답이 8.0%였다. 비교되는 정책이나 비교 집단이 애매하기 때문에, 각각의 수치를 절대적인 수준으로 평가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영유아 대상 무상 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만족도는 낮지는 않은 수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박미경·조민효(2014)는 한국복지패널 1차~7차(2006년~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만 5세 이하 자녀가 한명 이상 있는 가구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이 자녀 보육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들은 분석 결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정책이 자녀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전 연령 전 계층 무상 교육·보육이 실시되기 전인 2013년도 이전 자료만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을 차등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기의 수혜 대상 가구만으로 한정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윤희숙(2014)에 따르면, 2004년과 2012년 기간 동안 취업모와 미취업의 보육비용 차이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예 공적 지원을 포기하고 사보육 시장을 이용하거나 공적지원과 사보육을 병행해 사적부담이 증가하는 취업모 가구가 광범위가 발견된다고 하였다. 특히 사적부담의 증가나 취업여부에 따른 보육비용의 차이는 고학력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숙(2014)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 지원 정책이 취업 여부를 고려하여 이루어져 취업 여성의 보육비용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야할 뿐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횡단면 자료인 2004년 전국보육실태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2013년에 전면 시행된 전 계층 무상 교육·보육의 효과를 관측하기 어렵고, 표

본 특성의 차이에 의한 효과를 적절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전운정(2014)은 비용의 측면이 아닌 탈가족화, 성별화 측면에서 무상 보육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부는 현재와 같은 보육비 지원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육지원과 보육시설 공급 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와 아동수당 제도의 수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역효과로는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영아 부모의 이용이 증가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맞벌이 가구의 기관 이용이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주장(민연경·장한나, 2015:p.111)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김사현·주은선·홍경준(2013)은 교육·보육기관 대기자가 증가하고, 보육시설의 질적 하락이 촉발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신하영(2013)은 영유아 무상 교육·보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면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기 이전에 교육 시스템의 정비 및 교육 인프라,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 정책을 고수하면서 지원 대상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 III.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노동패널 자료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중단면 패널 자료로써, 매년 조사가 이루어져 동일한 대상에 대한 장기에 걸친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노동패널조사 자료는 1998년 전국(제주 제외)의 도시 지역 대표 표집을 통해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후 응답 대상 가구 및 가구원을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있다. 또한, 2009년도 12차 조사에서는 기존의 표본 마모를 보완하고 전국 대표 표본 확보를 위해 약 1,500가구를 추가 표집하여 대규모 가구 표본에 대한 2016년 현재 기준 19차년도 조사가 진행 중인 국가승인통계 자료이다. 특히 1차년도 조사 당시 원가구에 속한 영유아 뿐 아니라, 1998년 1차년도 조사 이후 원가구 및 분가가구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생 및 입양, 합가 등의 이유로 가구 응답에 포함되는 영유아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어, 영유아 가구의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기에 매우 적합한 자료이다.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구 내 아동별로 총 20여개 항목<sup>2)</sup>에 대해 이용 서비스 종류와 비용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패널에 포함된 영유아의 교육·보육 서비스의 종류로는 먼저, 개인 돌봄 서비스에 해당하는 동거하는 가족/친지, 비동거 가족/친지, 동거하는 타인, 비동거하는 타인으로 총 4개 항목, 어린이집은 설립 유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2) 서비스의 항목명은 조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기존 명칭을 유지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면접원이 정책 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고 가장 유사한 카테고리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정규유치원(4시간)과 같은 용어는 누리과정 도입 이후 사용하지 않지만, 유치원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4~5시간의 누리과정만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응답되도록 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진다.

민간어린이집, 직장 보육시설 총 3개 항목, 유치원은 이용 시간에 따라 정규유치원(4시간), 시간연장제 유치원(6시간), 종일제 유치원(8시간) 총 3개 항목, 학원 서비스로 사설 놀이방, 학원 등 2개 항목, 그 외 시간제 교육·보육 서비스로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인터넷 유료강좌, 문화센터 등 4개 항목, 그 외 기타 서비스 2개 항목, 16차년도 조사 이후 추가된 자녀의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등이다. 노동패널자료의 이러한 항목 분류는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나, 최근의 정책 변화를 잘 표현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과 같은 경우가 분리되지 못하고 민간어린이집에 포괄되거나,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이용 시간은 알 수 없다는 점 등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2.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 7차년도(2004년)~17차년도(2014년)까지 총 11개 차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영유아는 소득에 무관하게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실시된 2012년을 기준으로, 정책 수혜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이 분석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출생당시부터 전 연령 구간이 관찰되는 영유아로 구성하기 위해서 2004년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차수별로 출생년도별 보육연령은 <표 1> 과 같다.

<표 1> 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연령에 전 계층 교육·보육비 지원이 이뤄지는 시기로, 2012년도에 0~2세와 5세에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이뤄졌으며, 2013년도에는 전 연령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이뤄졌다. 2012년도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은 영유아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2006년생과 2009년생~2012년생이며, 2013년도에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은 2007년생~2013년생이었다. 다만, 노동패널의 경우 2013년도(13차년도) 조사 이후 보육연령 5세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2007년생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현황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음영이 아닌 출생년도의 영유아들은 가구소득에 따른 교육·보육비 차등 지원 정책의 적용을 받은 경우이다.

한편, 표에서 박스처리가 된 출생년도들은 가정 내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인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영아기 아동에 대해 가구소득에 따라 양육수당이 지원된 반면, 2013년 이후 굵은 글씨로 박스처리가 된 경우는 전 연령 전 계층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시기임을 나타낸다. 즉, 전 연령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을 받은 영유아들은 교육·보육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2007년생 이후 출생아들이다.

〈표 1〉 연도별 자녀 보육연령-출생년도 및 비용 지원 정책 대상 색인

		보육연령(월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48개월 미만	48~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기 준 연 도	2004년	2004년생	2003년생	2002년생	2001년생	2000년생	1999년생	1998년생
	2005년	2005년생	2004년생	2003년생	2002년생	2001년생	2000년생	1999년생
	2006년	2006년생	2005년생	2004년생	2003년생	2002년생	2001년생	2000년생
	2007년	2007년생	2006년생	2005년생	2004년생	2003년생	2002년생	2001년생
	2008년	2008년생	2007년생	2006년생	2005년생	2004년생	2003년생	2002년생
	2009년	2009년생	2008년생	2007년생	2006년생	2005년생	2004년생	2003년생
	2010년	2010년생	2009년생	2008년생	2007년생	2006년생	2005년생	2004년생
	2011년	2011년생	2010년생	2009년생	2008년생	2007년생	2006년생	2005년생
	2012년	2012년생	2011년생	2010년생	2009년생	2008년생	2007년생	2006년생
	2013년	2013년생	2012년생	2011년생	2010년생	2009년생	2008년생	2007년생
	2014년	2014년생	2013년생	2012년생	2011년생	2010년생	2009년생	2008년생

주: 1) 월령은 기준년도 1월 당시 자녀의 월령을 기준으로 함.

- 2) 각 셀마다의 년도는 자녀들의 출생년도를 의미하며, 음영 표시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이뤄진 시기의 출생년도, 음영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구분되는 시기임.
- 3) 출생년도에 박스처리가 된 경우는 양육수당이 지원된 시기로, 양육수당은 월령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기준년도에 일부 월이라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박스 처리함. 영유아 연령과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제한적으로 적용된 시기는 박스처리만 하였으며, 굵은 박스 글씨로 처리된 경우에는 전 계층 양육수당이 지원됨.
- 4) 2013년(16차)~2014년(17차) 노동패널조사는 5세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행태를 질문하지 않았으며, 1998년생~2003년생은 2004년(7차조사) 이후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에서는 0세 이후 전 연령이 관찰되지 않아, 해당 차수의 출생년도를 사선 처리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표기함.

본 연구에 활용된 응답자의 출생년도-보육연령별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총 11개 차수에 걸쳐 9,301명이었으며, 출생년도별로 2004년생이 1,107명, 2005년생 1,010명, 2006년생 1,375명, 2007년생이 1,033명 등이었다. 2009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2014년 기준 특정 보육연령에 도달하지 못해 응답자가 없는 경우가 있고, 2007년생과 2008년생은 5세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현황이 관찰되지 않아 분석 대상의 수가 적다. 또한, 출생당해년도에는 당해연도 조사월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관측치가 적다. 각 출생코호트별로 각 연령의 응답자 수는 150명~200명 내외로, 2006년생의 경우 2세 때 238명, 3세 222명, 4세 227명, 5세 226명이 관찰되어 다른 출생코호트에 비해 응답자 수가 많은 편이었다. 이처럼 같은 출생코호트의 응답자가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매해 응답가구의 응답 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각 조사차수별 응답자 수는 우상향 대각선 방향의 응답자를 합산하면 된다. 즉, 노동패널 2010년(13차년도) 조사의 응답자 수는 표의 음영 부분에 해당하는 응답자들로 1,227명이며, 2011년(14차년도) 조사의 응답자 수는 음영의 바로 아래 부분으로 1,279명이다. 노동패널 자료 내의 영유아 가구 수는 표본 추가가 이뤄지기 전인 2009년(12차년도) 이전에는 약 5,000개 내외의 응답가구 중 1,000가구 내외였으며, 2009년(12차년도) 이후부터는 약 6,500가구 중에서

1,200가구 이외의 영유아 가구가 조사되었다.

〈표 2〉 출생년도-보육연령별 분석 대상자 수

단위: 명

		보육연령(월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12개월 미만	12~24 개월 미만	24~36 개월 미만	36~48 개월 미만	48~60 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출 생 연 도	2004년 생	67	158	158	163	176	204	181	1,107
	2005년 생	64	143	138	153	181	170	161	1,010
	2006년 생	82	179	201	238	222	227	226	1,375
	2007년 생	51	168	201	202	205	206		1,033
	2008년 생	77	189	191	196	200	203		1,056
	2009년 생	63	161	183	189	193	188		977
	2010년 생	100	183	191	195	197			866
	2011년 생	124	176	194	195				689
	2012년 생	122	194	197					513
	2013년 생	101	151						252
	2014년 생	52							52
전체		903	1,702	1,654	1,531	1,374	1,198	568	9,301

주 : 음영 처리된 부분은 2010년(13차년도)조사에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자료 :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분석 대상자들의 인적 특성과 가구 특성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출생 코호트를 기준으로 정책 변화를 감안하여 2004년생~2006년생, 2007년생~2008년생, 2009년생~2011년생, 2012년생~2014년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004~2006년생의 경우 출생당해부터 5세까지 영유아기 전체가 관찰되면서 전 연령 전 계층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영유아기를 보낸 연령 집단이다. 2007년생~2008년생의 경우에는 출생당해부터 4세까지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가 관측되지만, 노동패널 자료의 한계로 인해 5세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를 알기 어렵고, 관측되지 않은 5세에 한해서 전 연령 전 계층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의 적용을 받은 연령 집단이다. 한편, 2009년생~2011년생은 자료 관측 마지막 차수인 2014년을 기준으로 영유아기를 다 지나지 않아 우측 절단이 있는 경우이면서, 전 연령 전 계층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의 영향을 중간에 받기 시작한 출생 코호트이다. 마지막으로 2012년생~2014년생도 2009년생~2011년생과 마찬가지로 2014년을 기준으로 영유아기를 다 지나지 않아 우측 절단이 있는 경우이지만, 출생 당해연도부터 전 계층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의 영향을 받은 코호트이다.

모든 코호트에서 남아의 비중이 여아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가구 내 영유아가 1명인 경우가 51.1%, 2명인 경우가 44.5%이었다. 가구별 평균 영아 자녀의 수는 전체 1.21명으로, 2009년생 이후 영아 자녀수가 많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2009년생 이후 자료의 우측 절단으로 유아기에 아직 진입하기 전인 출생년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자녀의 수가 출생코호트에 따라 크게 변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가구 내에는 영유아 자녀 뿐 아니라 학령기의 형제자

매가 있을 수 있고, 형제자매의 존재는 영유아 자녀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가구 내의 총자녀 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총자녀의 수는 1.82명으로,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 1.81명, 2007년생~2008년생 1.88명, 2009년생~2011년생 1.83명이었다. 다만, 2012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총 자녀수가 1.67명으로 약간 적은 수준을 보였지만, 이는 2012년 이후 출생아가 첫째아일 경우 둘째아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전 코호트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출생 순위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분석 대상의 절반가량인 49.9%가 첫째 자녀였으며, 둘째 자녀인 경우가 41.5%, 셋째 자녀 7.8%, 넷째이상인 경우가 0.8%였다. 출생 코호트별로는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 첫째 자녀의 비중이 52.4%로 다른 코호트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2007년생~2008년생은 셋째 자녀인 경우가 8.4%, 2009년생~2011년생 9.6%, 2012년생~2014년생 10.4%로, 2004년생~2006년생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다자녀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3〉 출생 코호트별 분석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출생 코호트별								전체	
		2004년생 ~2006년생		2007년생 ~2008년생		2009년생 ~2011년생		2012년생 ~2014년생			
전체		3,492	100.0	2,460	100.0	2,532	100.0	817	100.0	9,301	100.0
성별	남아	1,861	53.3	1,348	54.8	1,334	52.7	442	54.1	4,985	53.6
	여아	1,631	46.7	1,112	45.2	1,198	47.3	375	45.9	4,316	46.4
가구내 영유아수	1명	1,827	52.3	1,248	50.7	1,253	49.5	426	52.1	4,754	51.1
	2명	1,541	44.1	1,123	45.7	1,127	44.5	348	42.6	4,139	44.5
	3명이상	124	3.6	89	3.6	152	6.0	43	5.3	408	4.4
가구내 자녀수 (평균)	영아수	1.17		1.19		1.26		1.27		1.21	
	유아수	1.15		1.15		1.12		1.08		1.14	
	초등자녀수	1.10		1.13		1.15		1.18		1.13	
	총자녀수	1.81		1.88		1.83		1.67		1.82	
출생 순위	첫째	1,828	52.4	1,201	48.8	1,207	47.7	407	49.8	4,643	49.9
	둘째	1,453	41.6	1,028	41.8	1,064	42.0	315	38.6	3,860	41.5
	셋째	189	5.4	207	8.4	243	9.6	85	10.4	724	7.8
	넷째이상	22	0.6	24	1.0	18	0.7	10	1.2	74	0.8

자료 :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주 : 본 연구는 영유아가 있는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므로, 초등자녀의 수는 노동패널 전체 자료의 초등자녀 수 평균이 아닌 영유아가 있는 가구 중에 초등자녀가 있는 경우의 평균을 의미함. 총자녀수 또한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평균 값임.

분석 대상의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원수는 4명인 경우가 53.5%로 가장 많았으며, 3명이하인 경우 30.2%, 5명인 경우가 12.8%였다. 한부모 가구의 비중은 1%대로 높지 않았으며, 맞벌이 가구는 전체 응답자의 약 30%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04년생~2006년생의 31.0%, 2007년생~2008년생의 경우 30.7%, 2009년생~2011년생 27.7%, 2012년생~2014년생 26.3%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모(母)의 경력



단절이 영유아기에 크게 발생하며, 특히 영아기에 단절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최근년도 출생아일수록 자료가 우측 절단되어 있어 영아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표 4〉 출생 코호트별 분석 대상의 가구 특성

단위: 명, %, 만원

		출생 코호트별								전체	
		2004년생 ~2006년생		2007년생 ~2008년생		2009년생 ~2011년생		2012년생 ~2014년생			
전체		3,492	100.0	2,460	100.0	2,532	100.0	817	100.0	9,301	100.0
가구원수	3명이하	983	28.2	656	26.7	804	31.8	366	44.8	2,809	30.2
	4명	1,977	56.6	1,396	56.8	1,268	50.1	330	40.4	4,971	53.5
	5명	406	11.6	304	12.4	380	15.0	98	12.0	1,188	12.8
	6명	107	3.1	71	2.9	51	2.0	17	2.1	246	2.6
	7명이상	19	0.5	33	1.3	29	1.2	6	0.7	87	0.9
한부모 가구		50	1.4	26	1.1	22	0.9	2	0.2	100	1.1
맞벌이 여부	외벌이	2,408	69.0	1,706	69.4	1,832	72.4	602	73.7	6,548	70.4
	맞벌이	1,084	31.0	754	30.7	700	27.7	215	26.3	2,753	29.6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740	21.2	400	16.3	281	11.1	59	7.2	1,480	15.9
	200만원 ~299만원	1,078	30.9	681	27.7	696	27.5	239	29.3	2,694	29.0
	300만원 ~399만원	744	21.3	599	24.4	608	24.0	207	25.3	2,158	23.2
	400만원 ~499만원	432	12.4	347	14.1	391	15.4	121	14.8	1,291	13.9
	500만원 ~599만원	220	6.3	213	8.7	252	10.0	100	12.2	785	8.4
	600만원이상	278	8.0	220	8.9	304	12.0	91	11.1	893	9.6
	월평균 소득	318.5		339.2		374.1		381.4		344.6	
	실질소득	332.0		329.8		352.3		352.6		338.7	

자료 :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주 : 1) 영유아를 기준으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구 내 다수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 가구 특성은 동일한 수치가 중복 응답됨.

2) 가구소득은 가구원 전원의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됨. 이때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의 비정기적 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월 가구소득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로 나누어 환산하는 등 일부 자료를 보정함.

3) 가구 실질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2010)을 기준으로 산출함.

월평균 명목 가구소득은 최근 차수로 올수록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띠는데, 11년간 평균 344.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질 가구소득의 경우 2004년생~2006년생은 332.0만원, 2007년생~2008년생의 경우 329.8만원으로, 2009년생~2011년생 352.3만원, 2012년생~2014년생 352.6만원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때, 코호트별 가구소득은 특정년도의

가구소득 평균이 아닌 여러 해에 걸친 가구 소득의 평균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분석에서 2004년생 코호트의 평균 가구소득의 의미는 해당 코호트에 속한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2004년~2010년까지의 가구소득을 평균한 값이며, 2007년생 코호트의 경우 2007년~2012년까지의 가구소득을 평균한 값이다. 따라서, 코호트별 가구소득의 평균이 차이가 난다는 점은 연도별 물가상승의 영향과 함께 코호트별로 조사 집단의 특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표 5〉 출생 코호트별 분석 대상의 부모 특성

단위: 명, %

		출생 코호트별								전체	
		2004년생 ~2006년생		2007년생 ~2008년생		2009년생 ~2011년생		2012년생 ~2014년생			
어머니 특성											
출산 당시 연령	24세이하	167	4.8	115	4.7	75	3.0	17	2.1	374	4.0
	25~29세	1,497	42.9	940	38.2	568	22.4	149	18.2	3,154	33.9
	30~34세	1,452	41.6	1,085	44.1	1,309	51.7	485	59.4	4,331	46.6
	35~39세	351	10.1	271	11.0	524	20.7	147	18.0	1,293	13.9
	40세이상	25	0.7	49	2.0	56	2.2	19	2.3	149	1.6
학력	고졸이하	1,309	37.6	916	37.4	804	31.9	211	25.8	3,240	34.9
	전문대졸이하	1,081	31.0	791	32.3	785	31.1	263	32.2	2,920	31.5
	4년제대졸이상	1,093	31.4	744	30.4	934	37.0	343	42.0	3,114	33.6
취업 상태	임금근로	955	27.4	694	28.2	704	27.8	239	29.3	2,592	27.9
	비임금근로	176	5.0	149	6.1	77	3.0	29	3.6	431	4.6
	무급가족종사	73	2.1	32	1.3	31	1.2	6	0.7	142	1.5
	미취업	2,288	65.5	1,585	64.4	1,720	67.9	543	66.5	6,136	66.0

자료 :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주 : 1) 영유아를 기준으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구 내 다수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 가구 특성은 동일한 수치가 중복 응답됨.

2) 어머니 특성은 문항에 따라 무응답 결측치가 있으며, 비중은 결측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분석 대상 어머니의 출산당시 연령을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출산연령이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당시 연령이 30~34세인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 33.9%, 35~39세 13.9%였다. 출생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2004~2006년생의 경우 해당 자녀 출산 당시 어머니의 연령이 25~29세인 경우가 42.9%, 30~34세인 경우가 41.6%이었으나, 2007년생~2008년생의 어머니의 출산 당시 연령은 30~34세인 경우가 44.1%로 증가한 반면 25~29세는 38.2%로 감소하였다. 출산 당시 연령이 30~34세인 비중은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 51.7%로 상승하였으며, 2012년생~2014년생의 경우에는 59.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돼, 어머니의 출산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첫째아 이후 둘째아 출산으로 인한 어머니 연령 상승의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앞서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출생 코호트일수록 셋째아의 비중이 조금 증가하긴 하지만 첫째아의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머니의 출산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2008년생 이전 코호트와 2009년생 이후 코호트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2014년생의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졸 이상의 비중이 42.0%로, 2004년생~2006년생의 어머니의 37.6%가 고졸이하 학력자인 것과 대조되었다. 한편, 어머니가 취업자인 경우는 35%내외로, 어머니가 미취업자인 비중은 2007년생~2008년생 자녀가 있는 경우 약간 낮고 2009년생~2011년생 자녀가 있는 경우 약간 높긴 했으나, 자녀의 출생코호트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3. 분석방법

출생코호트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은 사건계열 분석(event sequence analysis)<sup>3)</sup>과 다항로짓 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이다.

사건 계열 분석(event sequence analysis)이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건들의 배열 순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횡단 자료나 시계열자료 분석과는 달리 데이터를 각 시점에서의 상태로 구분하지 않고, 연쇄된 사건 계열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는 분석 기법이다(Macindoe and Abbott, 2004). 바꾸어 말하자면, 사건 계열 분석은 한 시점에서의 상태가 아닌 장기에 걸친 일련의 사건 연쇄들 간에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건 계열 분석은 여러 시점에서 관찰되는 사건의 연쇄(event sequence)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 발생 순서를 고려하면서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장지연·이혜정, 2008; 반정호, 2010). 코호트(cohort)를 기준으로 한 사건 계열 분석은 일련의 사건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에 걸친 동태적 변화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집단을 구성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장기에 걸쳐 관측된 패널 자료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자료 구축 과정에서 표본의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수많은 사건 연쇄 단위(string)가 생성되기 때문에 유형화가 어렵고, 유형화 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 계열들 사이의 특징을 유추해 내기 위해, 사건 연쇄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한편, 영유아 자녀의 교육·보육 서비스 기관 종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짓 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짓 분석은 종속변수가 이분형이 아닌 다항으로, 기준이 되는 보육·교육서비스 대비 여타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대한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를 기준이 되는 서비스로 간주하였으며, 가구 및 자녀 특성 등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타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고 있을 확률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데 집중한다.

3) 분석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최효미(2014).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 p30~31의 내용을 참조하거나 폭넓게 인용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출생 코호트\*연령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패턴

지금부터는 출생 코호트별로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부터는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 자료 또한 수십개 혹은 수백개에 이르는 사건 계열을 생성시켰다. 이에 이용 패턴의 변화를 사건 연쇄 그래프로 그려서 제시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사건 연쇄 그래프를 이용할 경우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를 한 눈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사건 연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교육·보육 서비스가 서로 배타적이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서비스의 종류가 많으면 사건 계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최소한의 개수로 묶어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0.무응답, 1.어린이집, 2.유치원, 3.(다른 서비스 이용 전혀 없이) 부모가 직접 양육, 4.기타(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외) 서비스 이용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에는 설립 유형이나 이용 시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최우선 분류 기준이 되었으며, 1과 2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부모가 대체로 양육하지만 시간제로 학원을 이용하거나 학습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타서비스 이용으로 분류된다. 즉, 지배적 서비스 종류의 순서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 기타서비스 > 부모가 직접 양육의 순이다. 이는 영유아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부모의 양육은 기본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기관 이용과 병행되는 부모의 양육을 우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따른 행태를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춘 기준이다. 한편,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한 연령에 한 개의 서비스 이용 현황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논의의 편의상 이러한 복합적인 서비스 이용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한편, 출생코호트는 정책 변화 시기와 자료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04년생~2006년생과 2007년생~2008년생, 2009년생~2011년생, 2012년생~2013년생으로 총 4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각 출생년도별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같은 그룹에 속한 경우 패턴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 개 출생년도의 관측치가 250개 내외이고 출생년도는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집단화하였다. 2006년생 이전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료가 모두 관찰되는 코호트이며, 2007년생~2008년생은 5세때 무상 유아교육·보육정책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료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 2009년생~2011년생은 중간에 무상유아교육·보육정책의 영향을 받은 경우, 2012년생~2013년생은 출생 당해부터 무상유아교육·보육정책의 영향을 받은 경우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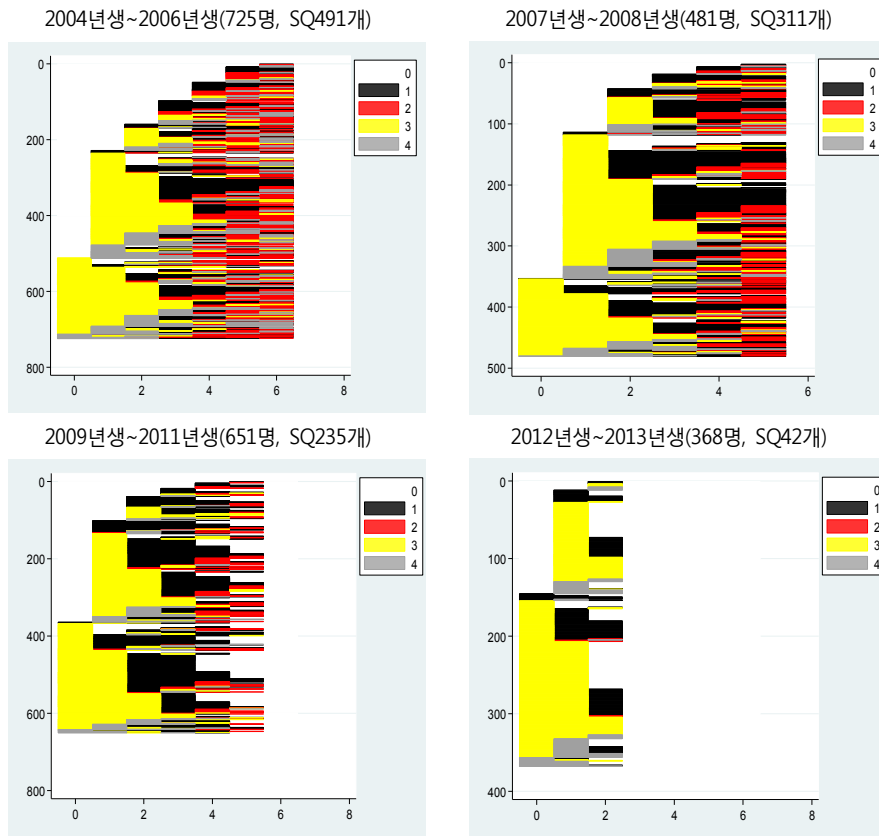
먼저, 출생코호트별 연령 증가에 따른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패턴을 살펴보면, [그림 1] 과 같

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녀의 연령을 나타내는 X축의 값이 생활연령(만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sup>4)</sup>. 하지만, 본문에서는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래프에 제시된 생활연령을 보육연령으로 환원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응답자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응답자가 0으로 사건 연쇄의 일련번호의 앞쪽 번호를 배정받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착시로<sup>5)</sup>, 매해 응답 여부에 따라 응답자 수에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2세 이후 응답자의 수는 크게 변동되지 않음에 유의해야한다.

[그림 1]에 따르면, 모든 코호트에서 영아기에는 가정 내에서 부모가 돌보다가(3, 노란색 표시 부분)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런데, 이때 어린이집 이용 시작 연령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연령 1세(그래프의 2세)와 2세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을 살펴보면, 2004년생~2006년생에 비해 2007~2008년생의 경우 어린이집(1, 검정색 표시 부분) 혹은 기타서비스(4, 회색 표시 부분)가 증가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며, 특히 2009년~2011년생의 경우에는 확연하게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단, 2012년생~2013년생은 관찰되는 연령이 짧아 대체로 가정 내에서 부모가 돌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른 코호트에 비해 기타서비스(4, 회색 표시 부분)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이나 개별돌봄서비스 등의 기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는 2007년생~2008년생의 경우 영아기에만 조금 발견되다가, 무상 유아교육·보육의 영향을 받은 코호트인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에는 보육연령 1세 일때도 기타서비스 이용이 크게 감소하고 어린이집 이용(1, 검정색 표시 부분)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2009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는 미취학 이전에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이뤄진 코호트로 1세 이후 어린이집의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지원이 기관 이용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4) 이는 사건 연쇄 그래프가 연속적인 연령의 증가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술적인 한계로, 출생당해년도를 0세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5) 사건 연쇄의 정렬 방식이 0000000 다음 0000001, 0000002의 순으로 정렬되기 때문이다.



자료 :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주 : 1) 범례는 0.무응답, 1.어린이집, 2.유치원, 3.부모가 직접 양육, 4.그 외 서비스이며, SQ는 사건 계열의 수를 의미함.  
X축은 연령, Y축은 빈도를 나타냄.

[그림 1] 자녀 성장에 따른 교육·보육기관 이용 패턴(출생코호트 집단별)

## 2.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종류와 조합 방식

지금까지는 출생코호트별로 주된 서비스 이용 패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항에서는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조합 방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통상 자녀의 연령과 가구 특성에 따라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계열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X축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육·보육서비스 조합 방식을 나타내는 이 경우에는 단순한 이용 서비스의 개수를 의미할 뿐 순서 자체가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X축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든 응답자가 응답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오른쪽으로 막대가 추가되는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범례는 0.무응답(흰색), 1. 부모가 직접 양육(노란색), 2.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검정색), 3.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빨간색), 4. 학원 이용(초록색), 5. 학습지 및 기타 서비스 이용(회색)으로 분류하였다<sup>6)</sup>.

[그림 2] 를 보면, 0세의 경우 대체로 하나의 교육·보육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 개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이 다소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1세의 경우 0세 때에 비해서는 다수의 서비스를 복수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세의 경우에는 복수 서비스 이용 뿐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과 학원 이용 비중이 꽤 증가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이용은 2004년생~2006년생에 비해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 크게 증가하였다. 복수 이용하는 서비스는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에는 학습지 등 기타서비스가 많았던데 반해,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에는 개별 돌봄 서비스와 학원을 복수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세가 되면 서비스의 복수 이용 비중이 확연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 절반가량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학습지 등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음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학원 이용 순이었다. 이때 복수 이용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학습지 등 기타서비스를 조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09년~2011년생의 경우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고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복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개별 돌봄 서비스를 조합하는 형태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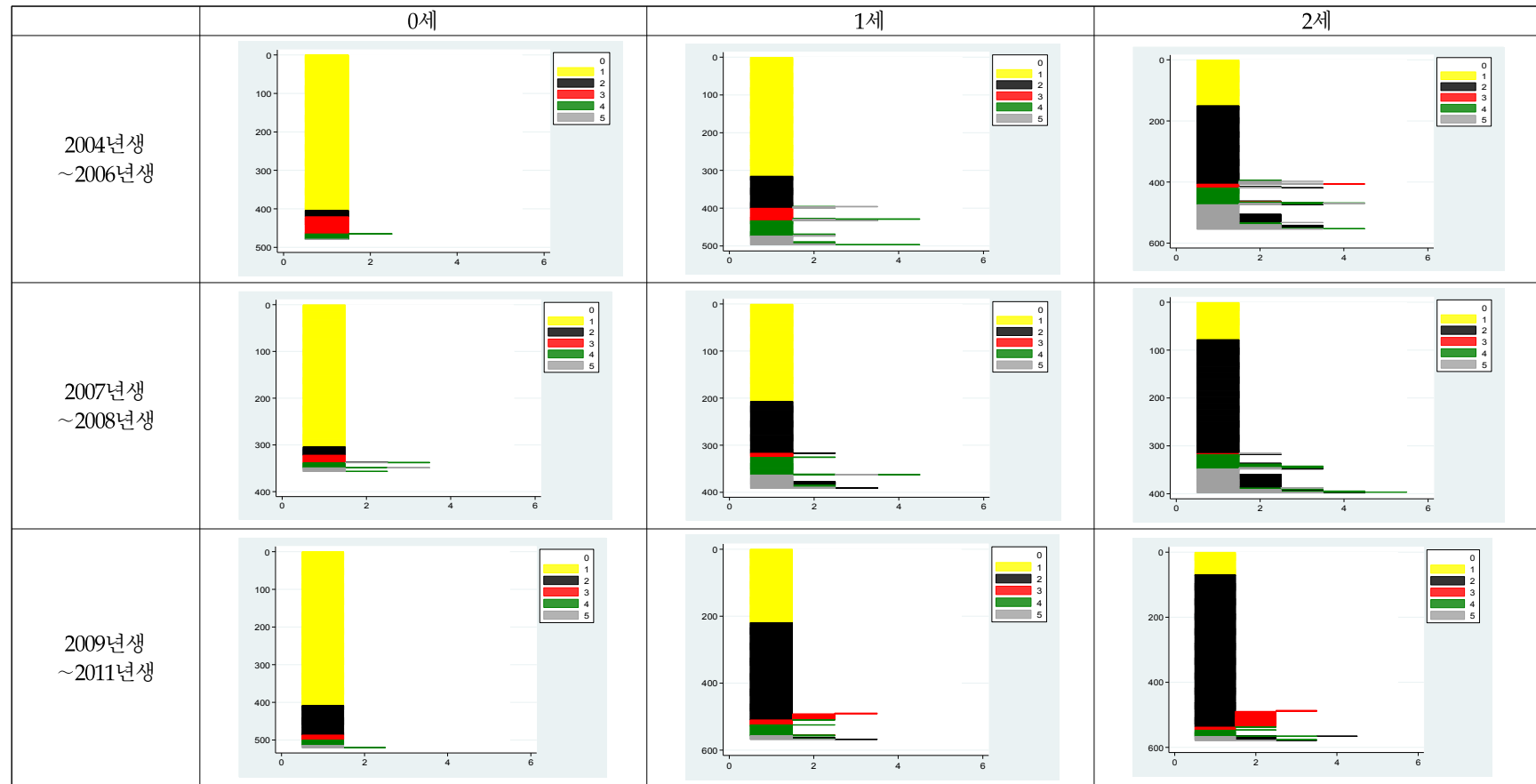
한편, 영아기와 달리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기의 교육·보육 서비스 조합 방식을 살펴보면, [그림 3] 과 같다. 3세의 경우 모든 코호트에서 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학습지 등 기타서비스를 조합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반해,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개별 돌봄 서비스를 조합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때, 2009년생이 3세가 되는 해는 2013년도, 2010년생이 3세가 되는 해는 2014년도로,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은 경우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즉,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시행되면서부터 학원 이용이 크게 감소하고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4세 때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조합을 살펴보면,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학습지 등 기타서비스를 조합한 경우가 보편적이었으며, 2007년생~2008년생의 경우 학습지 이용 비중이 감소하긴 했으나 2004년생~2006년생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2004년생~2008년생이 4세이었을 때, 교육·보육서비스를 2개 이상 이용하는 비중도 높을 뿐 아니라 여러 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09년생<sup>6)</sup>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의존도가 크게 높아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복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개별 돌봄 서비스를 조합한 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6) 앞서 연령 증가별 이용 패턴에서는 개별돌봄서비스와 학원, 학습지 등이 모두 기타 서비스로 분류되었는데, 이 항에서는 서비스 조합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비스 종류를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7) 2009년생이 4세일 때는 분석에 이용된 자료가 관찰된 마지막 년도인 2014년으로, 2009년생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다.

[그림 2] 출생코호트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종류(영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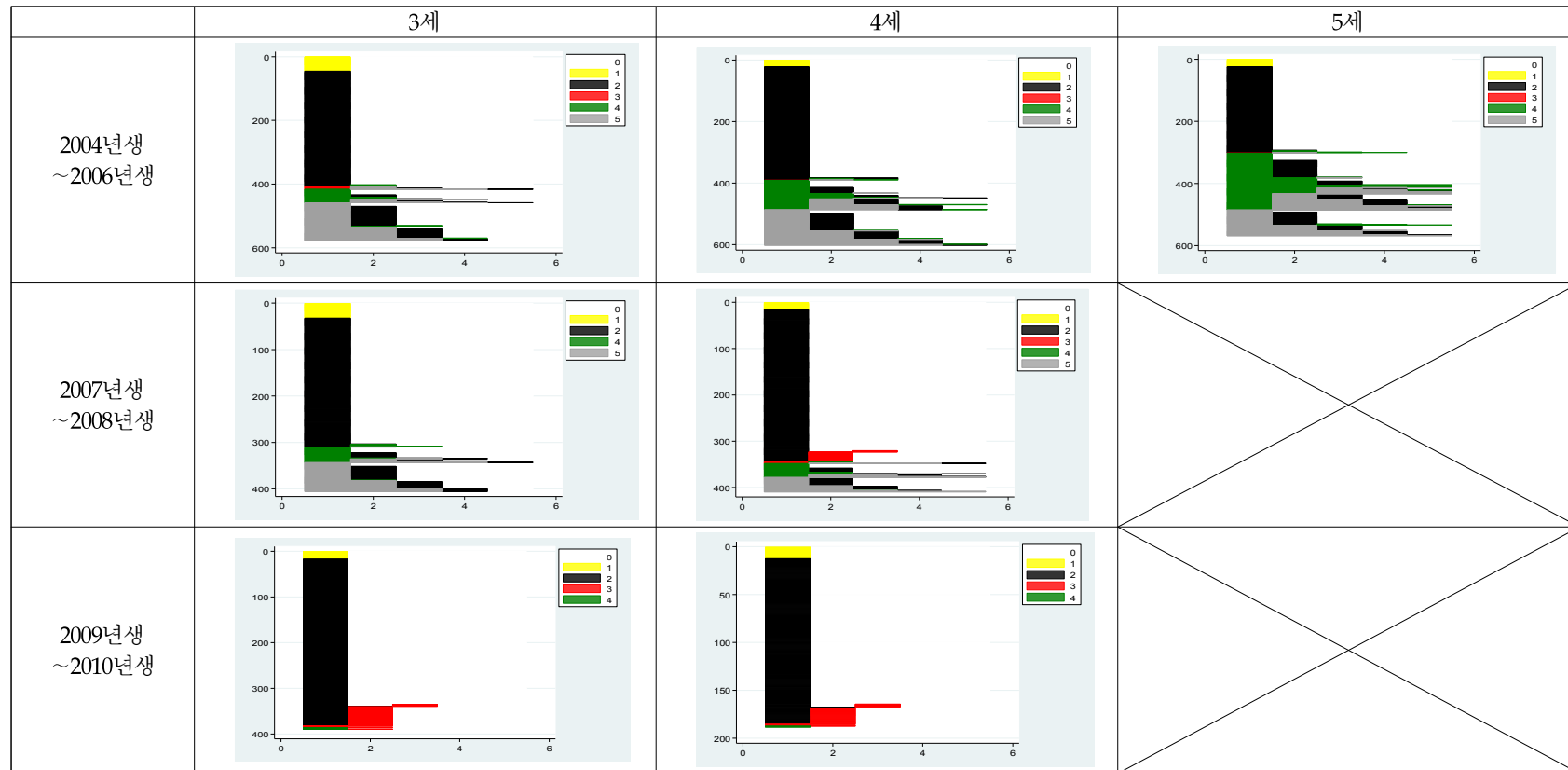
자료 :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주 : 1) 범례는 0.무응답, 1.부모 직접 양육, 2.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3.개별 돌봄 서비스, 4.학원, 5.학습지/개별교습 등을 나타냄.

2) X축은 이용 보육서비스의 종류로 단순한 일련번호 순일 뿐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한 수치가 아니며, Y축은 빈도를 나타냄.



[그림 3] 출생코호트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종류(유아기)



자료 :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주 : 1) 범례는 0.무응답, 1.부모 직접 양육, 2.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3.개별 돌봄 서비스, 4.학원, 5.학습지/개별교습 등을 나타냄.

2) X축은 이용 보육서비스의 종류로 단순한 일련번호 순일 뿐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한 수치가 아니며, Y축은 빈도를 나타냄.

3) 2009년생~2010년생의 연령별로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09년생의 경우 3세에 2013년, 4세가 2014년으로 3세와 4세에 모두 활용되었으나, 2010년생의 경우는 2014년도에 3세의 경우에만 이용되었음. 즉, 2009년생~2010년생 4세의 서비스 이용 조합은 2009년생만을 대상으로 함.

### 3. 교육·보육서비스 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이 절에서는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친 가구 특성과 자녀 특성에 대해 다항 로짓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이때, 출생코호트별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차이가 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를 가정 내에서 직접 양육하면서 다른 보육·교육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특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다만, 2009년생 이후 출생아들은 유아기 전체가 관측되지 않고, 2012년생 이후는 영아기만 관측되므로 기관 이용 특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육연령이 2세였을 때 이용하는 보육·교육서비스를 기준으로 출생 코호트별로 다항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육연령 2세를 기준으로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영향을 받은 출생코호트는 2009년생 이후로, 2008년 이전 출생아들은 2세에 유아학비·보육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받던 코호트이다.

먼저, <표 5>는 영유아기 전체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 여아일수록,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출생순위가 빠를수록(첫째 자녀일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부모가 가정 내에서 직접 양육하기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가정 내 양육 대비 유치원을 이용할 확률 또한 여아일수록,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여아일수록 자녀연령이 많을수록, 출생순위가 빠를수록(첫째 자녀일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 여아일수록,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가정 내 양육보다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출생순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과 기타서비스 이용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이, 가구소득과 모의 연령은 유치원 이용과 기타서비스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정 내 양육 대비 어린이집 이용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데 반해, 유치원과 기타서비스 이용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 혹은 기타서비스 이용에 드는 비용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 드는 비용에 비해 높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7년생~2008년생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경향성이 2004년생~2006년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기할만한 차이라면, 2007년생~2008년생의 경우 가정 내 양육 대비 기타 서비스 이용 확률이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에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가정 내 양육보다는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는데 반해, 2007~2008년생의 경우에는 가정 내 양육 대비 기타서비스 이용 확률이 외벌이 가구이든 맞벌이 가구이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어린이집 이용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반해, 2007년생~2008년생의 경우에는 가구소득 높을수록 어린이집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교육·보육서비스 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영유아기 전체(다항로짓: base 부모직접양육)

		출생 코호트별							
		2004년생~2006년생		2007년생~2008년생		2009년생~2011년생		2012년생~2014년생	
		Coef	p> z	Coef	p> z	Coef	p> z	Coef	p> z
● 어린이집 이용									
자녀특성	성별(남아=1)	-0.251**		-0.018		-0.097		-0.229	
	자녀연령	1.386***		0.689***		1.698***		2.621***	
	출생순위	-0.540***		-0.427***		-0.525***		-0.002	
	자녀수	0.613***		0.299*		0.650***		0.301	
가구특성	맞벌이여부(=1)	1.478***		0.593***		1.160***		1.309***	
	가구소득	-0.001		0.001***		0.000		0.002***	
어머니 특성	연령	0.260		0.010		0.457**		-0.240	
	연령의 제곱	-0.004*		-0.000		-0.007***		0.004	
	전문대졸여부(=1)	0.041		-0.066		0.029		-0.189	
	4년제대졸이상(=1)	-0.112		-0.107		-0.370**		-0.111	
	상수	-6.712**		-1.621		-9.872***		0.324	
● 유치원이용									
자녀특성	성별(남아=1)	-0.247*		0.101		-0.125		-0.317	
	자녀연령	1.901***		1.031***		2.808***		2.909***	
	출생순위	-0.162		-0.169		-0.343		2.995	
	자녀수	0.317*		0.210		0.677***		-1.780	
가구특성	맞벌이여부(=1)	0.948***		0.276		1.050***		1.646*	
	가구소득	0.001**		0.003***		0.001*		-0.001	
어머니 특성	연령	0.550***		0.222		0.521		0.990	
	연령의 제곱	-0.009***		-0.003		-0.008*		-0.129	
	전문대졸여부(=1)	0.203		0.136		-0.202		-1.044	
	4년제대졸이상(=1)	0.132		-0.082		-0.436*		-0.170	
	상수	-14.298***		-8.515**		-16.027***		-25.896	
● 기타서비스 이용									
자녀특성	성별(남아=1)	-0.295**		0.026		0.041		0.311	
	자녀연령	0.962***		1.218***		0.867***		1.351***	
	출생순위	-0.305*		-0.103		-0.327		0.394	
	자녀수	0.129		-0.249		-0.029		-0.432	
가구특성	맞벌이여부(=1)	1.266***		0.121		0.840***		2.041***	
	가구소득	0.001***		0.003***		0.001***		0.003***	
어머니 특성	연령	0.326*		0.161		0.825**		0.825	
	연령의 제곱	-0.005*		-0.002		-0.012**		-0.011	
	전문대졸여부(=1)	0.092		0.227		0.119		0.404	
	4년제대졸이상(=1)	0.234		0.269		0.387		0.416	
	상수	-7.849*		-6.857**		-17.262***		-19.405*	
N		3,492		2,460		2,532		817	

자료 :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주 : 1) \*\*\*는  $p < 0.01$ , \*\*  $p < 0.05$ , \*  $p < 0.1$ 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각 코호트별로 출생당해부터 5세까지를 폴링(pooling)하여 분석하였으나, 2014년(17차년도)까지의 관측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2007년생~2009년생은 출생당해~4세까지의 이용행태만 포함되며, 2010년생은 3세까지, 2011년생은 2세까지, 2012년생은 1세, 2013년생과 2014년생은 0세의 이용행태만 포함되므로 주의가 요구됨.

3) 2012년생~2014년생은 원칙적으로 유치원 이용자가 없어야 하지만, 2012년생 중 6명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치원 이용 확률은 이들 6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한편, 영유아기 중간에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정책의 영향을 받은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에는 모의 특성(연령, 4년제 대학졸업 여부) 등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코호트와 대조를 보였다.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가정 내 양육 대비 어린이집 이용 확률이 체감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어머니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에 비해 가정 내 양육 대비 어린이집 이용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 어머니가 4년제 대졸이상인 경우 고졸미만 학력자에 비해 가정 내 양육 대비 유치원 이용 확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을 끈다.

출생당시부터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정책의 영향을 받았으며, 영아기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만 관측되는 2012년생~2014년생의 경우에는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맞벌이가구일수록,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다른 코호트와 유사점을 가진다. 한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정 내 양육 대비 어린이집 이용 확률과 기타 서비스 이용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코호트에서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타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유사하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코호트별로 약간 상이하였다.

한편, 영유아들의 연령에 따라 기관 이용 행태가 크게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연령 2세를 기준으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해보았다(<표 6> 참조). 보육연령 2세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영아 자녀들의 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일 뿐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04년생~2011년생의 경우 모든 코호트에서 이용 행태가 관측된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 2004년생~2006년생이 2세 때 유치원을 이용한 경우는 47명, 2007년생~2008년생은 24명, 2009년생~2011년생 17명이 유치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연령 2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치원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실제 농어촌 지역 등에서 어린이집의 부족 혹은 형제자매 동시 입소를 위해 2세 영아를 조기에 받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sup>8)</sup>.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2세의 유치원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2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자나 유치원 이용자가 이용 행태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기 어려운 점, 2세 이용자 비중이 실제로 많지 않아 분석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통합하여 보육·교육기관 이용자로 간주하였다.

보육연령 2세 당시 부모 직접 양육 대비 보육·교육기관을 확률을 높인 가장 주요한 요인은 맞벌이 가구 여부로, 맞벌이 가구일수록 보육·교육기관 이용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출생 코호트별로는 2004년생~2006년생, 2007년생~2008년생은 맞벌이 여부만이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생~2011년생은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보육·교육기관 이용 확률이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대신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출생코호트별로 다소 상이했다. 먼저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8) 응답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기타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진데 반해, 2007년생~2008년생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기타 서비스 이용확률이 낮아졌으며 반대로 모가 전문대졸인 경우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모에 비해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타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6〉 교육·보육서비스 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2세 당시(다항로짓: base 부모직접양육)

		출생 코호트별		
		2004년생 ~2006년생	2007년생 ~2008년생	2009년생 ~2011년생
		Coef p> z	Coef p> z	Coef p> z
● 보육·교육기관 이용				
자녀특성	성별(남아=1)	0.056	-0.115	0.016
	출생순위	-0.116	-0.358	-0.198
	자녀수	0.175	-0.227	0.317
가구특성	맞벌이여부(=1)	0.848***	1.260***	1.938***
	가구소득	-0.000	0.001	-0.000
어머니 특성	연령	-0.127	-0.205	0.600*
	연령의 제곱	0.001	0.003	-0.009*
	전문대졸여부(=1)	0.002	0.004	-0.031
	4년제대졸이상(=1)	-0.044	-0.476	-0.474
	상수	3.238	5.510	-8.669
● 기타서비스 이용				
자녀특성	성별(남아=1)	-0.192	0.321	0.032
	출생순위	-0.132	0.428	0.489
	자녀수	-0.368	-1.336**	-0.441
가구특성	맞벌이여부(=1)	0.134	-0.024	1.307**
	가구소득	0.001	0.001	0.002*
어머니 특성	연령	1.397**	1.219	1.694
	연령의 제곱	-0.021**	-0.155	-0.025
	전문대졸여부(=1)	-0.316	0.899*	-0.985
	4년제대졸이상(=1)	-0.072	0.407	0.342
	상수	-22.419**	-23.173	-30.647*
N		554	398	579

자료 :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주 : 1) \*\*\*는  $p < 0.01$ , \*\*  $p < 0.05$ , \*  $p < 0.1$ 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보육연령 2세를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로, 2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치원 이용이 불가하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일부 이용자가 있을 수 있음. 노동패널 데이터에서 2세이면서 유치원 이용자는 2004년생~2006년생 47명, 2007년생~2008년생 24명, 2009년생~2011년생 17명이 있었으며, 이는 어린이집 이용자와 함께 보육·교육기관 이용자로 간주하여 분석함. 유치원을 제외하고 분석 결과와 계수값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유의도 자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즉,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은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에는 외벌이 가구인 경우에 비해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모의 직접 양육(혹은 가정 내 양육)보다는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았으며, 기타서비스 이용 확률도 높았다. 반면, 유아학비·보육료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던 시기에 2세였던 2004년생~2008년생들은 맞벌이

가구 여부가 유의미하게 가정 내 양육 대비 보육·교육기관 이용을 증가시키기는 했으나, 기타 서비스 이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가정 내 양육 대비 보육·교육기관 이용 확률이 높아진데 반해,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에는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가정 내 양육 대비 기타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이때, 기타 서비스는 학습지 및 학원, 개별 돌봄 서비스 등의 서비스로 부모가 돌보는 과정에 보육·교육서비스를 약간의 시간동안 병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이전에는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기보다는 기타 서비스(학습지, 학원 등)의 활용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반해,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이후 보육·교육기관 의존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특이한 점은 2007년생~2008년생의 보육교육기관 이용 행태로, 가정 내 양육 대비 기타 서비스 이용 확률이 2004년생~2006년생 혹은 2009년생~2011년생과는 부호 자체가 반대 방향인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우나, 2007년은 이례적으로 출산율이 매우 높아 당해년도 출생아가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출생 코호트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즉, 당해년도 출생아가 많아 보육·교육기관 이용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임에도 가정 내 양육 확률이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 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출생코호트별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와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코호트에서 영아기에는 가정 내에서 부모가 전적으로 돌보다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다만,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른 코호트에 비해 기타서비스의 이용이 많은데 반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기타서비스 이용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영향을 받은 코호트인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 영아기 때부터 기타서비스 이용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수로 이용하는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함께 기타서비스를 조합하는 형태가 많은데 반해,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은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에는 복수 기관 이용자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복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함께 개별돌봄서비스를 조합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 시행을 전후하여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다항 로짓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 여아일수록,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가정 내 양육보다는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어린이집 이용과 기타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졌으며, 가구소득과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유치원 이용과 기타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2007년생~2008년생의 경우에는 2004년생~2006년생 코호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기타서비스 이용 확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데 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기 중간에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정책의 영향을 받은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에는 다른 코호트에 비해 모의 특성(연령, 학력 등)이 부모의 직접 양육 대비 어린이집 이용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연령 2세 때의 부모 직접 양육 대비 보육·교육기관을 확률을 높인 가장 주요한 요인은 맞벌이 가구 여부로, 맞벌이 가구일수록 보육·교육기관 이용 확률이 높아졌다. 다섯째,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을 전후하여, 맞벌이 가구 여부가 가정 내 양육 대비 기타서비스 이용 확률에 다소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책 지원 시행 후인 2009년~2011년생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영향이 포착되었다. 여섯째,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 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 내 양육대비 보육·교육기관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데 반해,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에는 기타서비스 이용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을 전후하여, 영유아가구들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어린이집 이용 시기 자체가 빨라지는 경향성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한편, 모든 코호트에서 기관 이용에는 맞벌이 여부가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을 전후하여 코호트에 따라 기타서비스 이용 행태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가정 내 양육 대비 기타서비스 이용 확률은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 전에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데 반해, 정책 시행 후 맞벌이 가구일수록 기타 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 제공받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 전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의 급증과 기타서비스 이용의 감소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도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 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기관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에 비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의존도가 더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으로 최소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으로 인해, 교육·보육비용의 절감이 유도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 전후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행태를

종단면 자료 및 출생코호트별로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변화에 따른 행태 변화를 포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를 촉발한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의 보다 긍정적인 목적인 교육·보육 비용 절감 효과 혹은 모의 취업 유인 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본 연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 문헌

- 김사현·주은선·홍경준(2013), 「무상보육 및 관련 정책이슈들에 대한 핵심 이해집단의 선호 분석 : 서울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 40권 2호, p205~235.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나정(2014), 「유아무상교육·보육정책분석 : Cooper 등의 다차원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유아교육학논집』, 제18권1호, p49~71.
- 민연경·장한나(2015), 「보육정책의 이슈네트워크 분석 :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4권 2호, p97~138.
- 박미경·조민효(2014),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23권 3호, p241~271.
- 반정호(2010), 『한국은퇴세대의 근로생애와 경제적 복지수준의 관계』,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 백선희(2012), 「0~5세 무상보육 진단과 과제」, 『젠더리뷰』, 통권24호, p50~56.
- 신하영(2013), 「누리과정 재정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2권4호, p149~185.
- 윤희숙(2014), 「보편적 보육지원확대가 취업모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1~21.
-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III』, 육아정책연구소.
- 장지연·이혜정(2008), 「중고령자의 근로생애 유형-사건계열분석기법을 이용한 취업력 분석」, 『노동리뷰』, 42호, p76~86.
- 전윤정(2014), 「무상보육 정치의 공공성의 전유, (재)가족화, 성별화 - ‘무상보육’ 도입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4권 2호, p113~151.
- 조경엽·유진성(2013),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효과」, 『KERI Insight』 12-09, p1~19.



최효미(2014),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Macindoe, H., & Abbott, A.(2004), “Sequeu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Techique for Social Science Data” , *Handbook of Data Analysis*, Sage Publication.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 34조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 2

유아교육법 제 24조